



2016. 11. 7 (월)
아산시청 별관 회의실(1층)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창립식 및 제1차 회의자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축사환경개선을 유도하여 지역
민원해결과 쾌적한 축산업 확보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 도모

1. 추진방향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과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 방안 도출
-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전문가 및 도민이 함께 활동
 - 아산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심으로 연구
- 연구 성과를 도정 및 일선 시·군에 반영 유도하고 보고서
발간·정보공유

2. 회원현황 : 총19명

구분	성명	소속	
대표	김응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연구간사	이상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회원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송덕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복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홍재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정규재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장	
	오형수	충청남도 축산과장	
	고일환	충청남도 환경정책과장	
	이돈규	충청남도 산림복지과장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백충현	아산시 축산단체협의회장	
	신우식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서석천	두원농장 대표	
	지덕환	덕환농장 대표	
	홍성학	계림농장 대표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무허가 축사
- 사업기간 : 2016년 9월~2017년 11월(14개월)
- 사업내용
 - 도내 무허가축사 유형별 현황파악 및 관리실태 점검
 - 무허가축사 현장방문
 - 과제발굴을 위한 워크숍
 - 전문가 및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시행
 - 중앙부처 전문가 초청교육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4. 도내 무허가축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제도개선 미비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환경부 규제강화 :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 강화*
- *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폐쇄·가축사육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그동안 추진상황

중양 부처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3.5.31, '15.4.27, '16.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에 합성수지 포함 등 적용확대 등 ○ 가축분뇨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3.24, '15.3.24,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중지명령, 축사폐쇄 등 행정처분을 축종별·규모별 단계적 집행 ○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시달(2015.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합동, 제도개선 사항, 방안·절차 설명 ○ 기타 제도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을 한시적으로 3년간 유예(2018.3.24.까지) -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거리제한 이격거리를 축소, 농가편의 도모)
지자체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전수조사 실시(붙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16,926농가 중 무허가 축사 9,461농가(5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7,369(77.9%) > 닭오리 932(9.9%) > 돼지 710(7.5%) > 기타 450(4.7%) → 2016. 10월 현재 도내 186농가 적법화 완료(진도율 2%, 붙임 2) ○ 시·군별 지자체 건축법 조례개정*(붙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시군 개정, 4개 시군 미개정 → 조례 개정안 내역을 공유하여 전체 시군 조례개정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강제금 적용율 축소(60%~최대100% → 60%~90%) 등 ○ 출하대 지원사업관련 무허가축사 적법화 세부실시요령 개정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에 포함시킨 출하대를 방역시설로 지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로 규정시, 처리시설 증축필요 및 가축사육제한 구역, 출하대 설치 불가

○ 문제점 및 애로사항

농가 내적 문제

- 축사적법화 추진 비용 소요(농가당 약 500백만원)
 - 측량비, 설계비 및 이행강제금 부담
- 성광원 등 축사밀집 지역, 건폐율 적용 곤란
 - 건폐율을 60%로 상향했어도 축산 밀집지역, 건폐율 적용으로
-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건축된 축사
 - 타인 토지, 지적도상 적법화 불가능한 지점에 건축된 축사(구거, 도로 등)

농가 외적 문제

- 비축산 농가의 축사확장 반대 주장
 - 악취발생 등으로 무허가 축사 철거요청에 반하는 적법화 추진 반대
- 관련법을 엄격히 준수한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추진에 대한 이견
 - 건축법 및 환경법을 준수한 축산농가들의 상대적인 불만*
 - *범법자들에 대한 건폐율 상향조정 및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혜택
- 민선 자치단체장 등의 축산농가 및 비축산농가에 대한 이해상충
 - 축산 찬성 목소리보다 축산 반대 목소리의 상대적·시대적 흐름

5. 세부 사업계획

◎ 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
농가 소득증대 방안
- 관련분야 : 농업정책, 환경관리, 건축도시, 산림환경, 축산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정기모임

◎ 무허가축사 실태 파악

- 사업개요 : 도내 무허가축사 현황 및 관리실태 파악
- 사업대상 : 도내 15개 시·군 무허가축사
- 사업내용
 - 도내 무허가축사 축종별 유형별 현황파악
 - 불법건축물 건축법 위반 적법화 가능기준 제시
 -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 적법화 가능기준 제시
 - 산림형질변경 위반 적법화 가능기준 제시 등 불법사항 적법화
기준 제시

◎ 중앙부처 전문가 초청교육

- 사업개요 : 중앙부처 전문가 초청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 사업내용
 -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기준 상세
설명과 교재 배부

◎ 정책토론회 시행

- 사업개요 : 전문가 및 도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시행
- 사업내용
 -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과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 발간보고서 · 배포

- 사업개요 :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 사업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실질적 정책 대안과 축산농가의 활용방안

6. 사업 추진일정

- 연구모임 1차 회의(16. 11월중)
- 무허가축사 실태조사 실시(16. 11월중)
- 연구모임 제2차 회의(16. 12월중)
- 중앙부처 전문가 초청 무허가축사 적법화교육(17. 3월중)
- 무허가축산농가 현장방문(17. 5월중)
 - 방문지역 :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 정책토론회 개최(17. 7월중)
- 보고서 발간 및 배포(17. 11월중)

7. 기대성과

- 무허가축사의 불법사항을 적법화 시켜줌으로써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환경개선을 유도하여 지역민의 악취로 인한 민원해결
-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함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어 축산업 활성화 도모
- 도의회 연구모임 활성화로 연구하는 도의회 만들기 성과 창출.

붙임 1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전수조사 결과

구 분	축사현황	무허가축사현황	무허가 비율	비고
계	16,926	9,461	55.9	
천안시	778	492	63.2	
공주시	2,367	1,164	49.2	
보령시	1,146	675	58.9	
아산시	724	567	78.3	
서산시	1,245	624	50.1	
논산시	1,012	458	45.3	
계룡시	23	10	43.5	
당진시	1,385	904	65.3	
금산군	385	183	47.5	
부여군	1,345	689	51.2	
서천군	506	215	42.5	
청양군	1,176	522	44.4	
홍성군	2,550	1,634	64.1	
예산군	1,766	1,025	58.0	
태안군	518	299	57.7	

붙임 2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구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적법화 추진율	비고
		상담	추진중	완료		
계	9,461	4,095	740	186	2.0%	
천안	492	78	117	11	2.2	
공주	1,164	505	10	3	0.3	
보령	675	600	60	13	1.9	
아산	567	100	1	1	0.2	
서산	624	500	30	0	0	
논산	458	450	10	9	2.0	
계룡	10	7	3	0	0	
당진	904	162	14	37	4.1	
금산	183	283	180	3	1.6	
부여	689	200	10	4	0.6	
서천	215	80	15	4	1.9	
청양	522	170	80	2	0.4	
홍성	1,634	260	50	69	4.2	
예산	1,025	600	100	30	2.9	
태안	299	100	60	0	0	

붙임 3

시·군별 건축조례 개정 등 조치내역

시·군	조치내역	비고
천안시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조정(5m → 1.5m) ※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경우 2018.3.24.까지 대지안의 공지 미적용	
공주시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조정(5m → 0.5m)	
보령시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조정(5m → 0.5m) ▶ 이행강제금 조정 - 위반종류에 따른 70~100% → 60%로 일괄 하향	
아산시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조정(5m → 1.0m) ▶ 이행강제금 조정 - 위반에 따른 비율 70%~100% → 항목별 10% 감	
서산시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조정(3m → 1.0m) ▶ 이행강제금 조정 - 용적율 초과 70%, 그 외 위반 일괄 60% 적용	
논산시	없음	
계룡시	없음	
당진시	▶ 대지안의 공지 조정 요청 → 건축과 - 1~6m를 → 1m로 축산부서에서 건축부서 요청	
금산군	▶ 이행강제금 조정 - 건폐율 초과 80→70%, 용적율 초과 90→80% 무허가 100→80%, 미신고 70→60% 적용	
부여군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조정(3m → 1m) 예정	
서천군	없음	
청양군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1m 조정 요청	건축부서 회의적
홍성군	▶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조정(5m → 0.5m) 예정 - 2018.3.24.까지 무허가 축사에 한해 한시적	
예산군	없음	
태안군	▶ 측량비 및 설계비 지원예산 확보 - 군비 50,000천원, 자담 50,000천원 ※ 농가당 최대 1,000천원 지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2024년까지 3단계로 순차 진행농식품부 “기존 가축분뇨법 부칙에 있던 내 용 확정 발표한 것”

• 배정은 기자
• 승인 2016.10.21 16:23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정부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무허가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나 비어있는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전체허가·등록 농가 12만6,000호 가운데 6만190호가 적법화 실시 대상으로 집계됐다. 한우·젖소가 5만2,469호로(87.2%)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부는 무허가축사를 축사의 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 9조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축종·단계별 기준과 농가수를 확정 발표한 것이어서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소 71두 이상, 돼지 760두 이상, 닭·오리 2만수 이상) 2만384호는 기존에 예정됐던 2018년 3월 24일, 2단계 대상 농가 4,312호는 2019년 3월 24일, 3단계 대상 농가(소 57두 미만, 돼지 506두 미만, 닭·오리 1만2,000수 미만) 3만5,494호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면 된다. 사실상 전업농 대부분은 2018년까

지 적법화를 마무리 지어야하는 상황.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을 매월 지자체와의 영상회의로 확인하고 대상농가의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실적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에는 우수사계 워크숍을 개최해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사항과 추진계획을 공유할 방침이다.

지난 20일에는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적법화 추진방안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무허가축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사 절반 무허가… 2024년까지 개선

가축분뇨법 등 기준 미달 농림부, 순차 적법화 추진

전국 축사 10곳 중 5곳은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상당수가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도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규모가 큰 축사부터 순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상 축사 허가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2만 6000 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6만 190호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됐다. 축사 종류별로 보면 한우·젖소 농가가 5만 2469호(87.2%)로 가장 많았고, 닭·오리(7.6%), 돼지(5.2%) 농가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분뇨처리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예 축사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별도 허가를 받거나 위탁처리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최대 폐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는데 당시 다소 까다로운 규정 탓에 일부 정화시설 등을 갖추고도 축사 허가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면 해당 축사에서 분뇨처리 등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피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등 오히려 환경오염 및 주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2만 384호, 2단계로 2019년 3월까지 4312호, 2024년까지 3만 5494호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건축법상 건폐율 조정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들이 현재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연차별 적법화 추진 등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논란 여전…농 식품부-축산단체 간담회

이병성·안형준 기자 leebs@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축사를 대상으로 무허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단계별 적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20일 서울 서초 제2축산회관에서 축종별 축산단체장들과 향후 무허가축사 대책을 논의했다.

낙농가 입지제한구역 대책 마련 미흡 문제제기
“무조건 시행보다 시뮬레이션 사전검증” 제안도

이날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 규모에 따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이 다른데 축산농가 전수 조사를 한 것은 2018년 3월까지 적법화해야 하는 농가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별 적법화 대상 농가가 파악됐는데 이 중에서 한우와 젖소 농가가 87%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가 수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축산단체장들은 농식품부의 무허가축사 대책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들이 이행강제금 경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축사 1000평에서 5평이 무허가인 경우 무허가 부분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농농가들의 무허가축사 문제는 특히 심각한 실정이다. 김봉석 낙농육우협회 전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에 낙농가의 80~90%가 포함

된다”며 “그러나 경기도에 절반 정도 위치해 있는데 입지제한 구역에 묶여 근본적으로 적법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입지제한 구역 대책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해결방안이 없다”며 “세정수와 관련해서도 처리 업체가 3~4개 밖에 없고 그렇다고 세정수 처리시설 갖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입지제한 구역 지정이 목장 시작한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 인지 문제는 축산하시는 분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입지제한 구역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지 않았을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무조건 시행하는 것보다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닭과 오리는 무허가 농가가 입식하면 계열 업체도 처벌받게 되는데 농가 지도를 하려면 농식품부 조사 자료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2018년 3월 24일 1단계까지 1년6개월도 안 남았는데 시기를 더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의 무허가축사 대책이 발표된 이후 무허가축사 시한이 2018년 3월에서 2024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요즘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님은 간척지 축산에 관심이 높다. 대안으로 간척지 조사료단지 만들고 축사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지자체에서도 무허가축사 관련 TF 조직을 유도해 원활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계협회, 무허가 축사 양성화 앞장 시군 지부장 대상 도별 간담회 2주간 실시

[전업농신문]

기사입력(2016-10-27 12:17:26)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가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시군지부 활동지침을 설명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4일 예산축협에서 충남권역을 시작으로 오는 4일까지 도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무허가 축사는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 무허가 축사는 이보다 더 많은 60~70%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와 환경규제로 인해 축사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무허가축사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축사 양성화기간을 설정해 무허가축사를 제도권 안으로 진입키 위해 관련법을 정비,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양계협회의 진단이다.

양계협회는 이어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도지회 및 시군지부장을 대상으로 도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에서 공통으로 추진해야 할 ‘무허가축사 양성화 활동지침(메뉴얼)’을 설명하고 양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 조례 등 규제사항에 대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